

시론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내년 6·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이후 관심이 집중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 지형은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더욱 복잡해진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과 향후 판세 변화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민주당 정경래 당대표의 ‘당원 주권시대’ 강조로 내년 지방선거는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 상향과 역올한 컷오프로 인한 공천 배제는 없어야 한다는 기조다. 컷오프 최소화 원칙과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향후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경선률’과 ‘공천’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전력하는 민주당과 정경래 당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선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호남은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본선보

민주당 경선률, 권리당원보다 국민여론조사 비중 확대해야

다 당내 경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다. 역대 선거 때마다 늘 논란과 잡음은 있었지만 당내 국민참여경선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호남지역 여론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조기대선과 2022년 지선에서 시행했던 권리당원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은 물론 지난 8·2 전당대회와 권리당원 55%·대의원 15%·국민 30% 적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혁신 공천을 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보다 국민여론조사 비중 확대와 호남 경선률을 국민여론조사 100% 적용을 고려할 바라한다.

호남지역의 경우 국민여론조사 100% 적용을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민여론조사는 당원 뿐만 아니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한 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선택에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호남은 당원과 시민의 정치적·정서적 차이와 괴리감도 별반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과 당원을 구태어 나뉘 생각할 필요가 없다. 8·2 전당대회 당시 호남 권리당원은 민주당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권리당원 수가 타 지역을 압도해 민주당 지지도가 전국 어느 곳보다도 독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당내 경선이 본선과 같은 호남에서 역량과 자질·도덕성에 흠결 있는 후보가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공천된다면, 당심이 민심

을 왜곡할 수 있다. 최근 실시된 몇 차례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 흐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왜곡’ 논란이 일었다. 호남지역은 권리당원 중심 경선으로 결과가 좌우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 8월 광주·전남에서 30만여 명이 입당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허위·중복 등으로 40% 넘게 반려됐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와 주장이 강할수록 국민여론조사 비중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경선률 조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중앙당 관계자들도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은 경선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하루 10여 개씩 날아드는 문자로 대부분의 시민이 일상생활에 불편·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4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사조차 없던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날마다 보내오는 여론조사와 지지 요청 문자 때문이다. 과거 퇴행적 선거 운동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올바른지 못한 정치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평소 지켜봐 온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 이유다.

기존의 틀을 깨야 하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지선에 이어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의 정권 재창출은 묘연해질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3개월과 계엄으로 얼룩져 불행했던 과거도 언제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작용·반작용’의 원리처럼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음식을 먹었다면 소변, 대변이 나오는 것이 응당하다. 하지만 유독 대변이 안 나오거나 화장실을 가도 개운한 느낌을 갖지 못하는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변비의 정의는 1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1~2일에 1~2회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요한 점은 배변 시 힘이 과다하게 필요하거나, 항문부 폐쇄감이 들거나, 수분이 결핍된 단단한 변을 보는 상태라면 더욱 변비를 의심할 수 있다.

변비의 증상은 배변활동이 적거나, 대변을 배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거나, 대변을 본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원인은 기질적 원인이 없는 특발성 혹은 기능성 변비가 대부분 90% 이상이다. 일과성인 경우가 많으며 소식, 음식량 저하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완성 혹은 경련성으로 대장의 연동운동에 기능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질적 원인으로는 대장이나 항문의 장애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해 불편한 ‘변비’

가 있거나 내분비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질적 변비를 제외하고 기능성 변비를 진단하는 것은 증상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 변비가 발생한지 6개월 이상 이어야하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배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혹은 단단한 변이 나오거나 혹은 잔변감이 있거나 혹은 항문이 막힌 느낌이 들거나 혹은 관장이나 다른 요법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배변이 3회 미만인 경우의 6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기능성 변비로 진단할 수 있다.

변비는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법은 식이요법, 생활관리, 약물치료, 침구치료, 한약치료가 있다.

식사량이 적은 경우 배변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당히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섬유질을 함유한 김치, 미역국, 콩나물, 들깨 등을 함께 곁들이면 좋다. 섬유질은 거친 구조물로 장에서 변을 움직여주므로 배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충분한 수분섭취(하루에 1.0~1.5L)를 해줘야 변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

생활관리는 배변훈련과 근육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대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억을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기상 후 혹은 아침 식사 후에 배변을 보는 습관을 만들면 제 때

에 대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때 변기에 15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복근이나 직장괄약근 운동을 통해 근육의 힘을 강화하면 장의 연동운동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

약물치료는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한다. 수분과 결합해 대변의 부피를 늘리는 부피형성 하제, 장내 수분을 증가시키는 삼투성 하제, 장의 점막을 통해 자율신경말단을 자극하는 자극성 하제가 있다. 변비약의 주의할 점은 최소 유효량을 투여하고, 횡수를 줄여가며 투약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약에만 의존하다보면 장 운동이 약해져 급만현상으로 변비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침치료는 만성 기능성 변비에 안전한 치료법이며 또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변비에 유효한 혈자리 위주로 치료를 진행한다. 지구혈, 조해혈, 천추혈 등의 혈자리에 시술한다. 한약치료는 양약의 부작용은 줄이고 근본적으로 장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삼습성 변비의 기본처방으로는 대황감초탕(大黃甘草湯), 여성에서 월경통을 동반한 변비에는 도핵승기탕(桃核承氣湯), 고령층에서 굳은 변을 볼 때는 마자인환(麻子仁丸)을 주로 처방한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불편해지면 하루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다. 가벼운 몸 상태를 위해서는 장 건강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장칼럼



김재출
진소소방서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할 때가 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119.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오·남용으로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진소소방서에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

119구급차,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킨다

화 정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자제해야 한다. 단순 감기, 만성질환 관리, 정기 병원 이송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119 신고는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짐으로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둘째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돼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다 중요하다.

셋째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된다. 최근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한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실 것을 바란다.

모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가AI컴퓨팅센터 후폭풍 진화 정부 책임있는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광주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읍소했으나 선택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단독 응찰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 일원을 부지로 낙점한 것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라고 했던 글로벌 선도기업의 오픈 AI와 SK그룹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민관 합작 2조5천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까지 손에 쥔 전남도는 에너지 거점 신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연구원 설립, AI 집적단지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지난 5년 간 4천300억원의 AI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6천억원 수준의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컴퓨팅센터에 총력전을 펼쳤는데, 무위로 끝났다.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5극3축’ 전략도 마찬가지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

치단체를 선도모델로 삼아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직·간접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뼘리라는 호남권 역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 국가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공동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었다. 앞으로 상생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을 더한다.

KT와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이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한 큰 그림이다. 반대급부로 광주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겠다. 2028년 말 개시를 목표로 한 전남의 국가AI컴퓨팅센터와 이미 운영 중인 광주의 국가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 등 협업체제로 AI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광주의 활로를 모색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긴급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각계의 의지를 담은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에 냈다.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으로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했으나,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역력하다.

불황에 성장 멈춘 편의점 폐업조치 못하는 이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은 자영업 과밀화와 비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만큼 ‘안전한 창업, 공정한 운영, 자율적 폐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폐업이 불가피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권리를 명문화했다.

불황의 장기화가 대표 자영업종인 편의점에 도 과급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매년 꾸준히 늘던 점포가 차츰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천319곳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천377곳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치로 2년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편의점 수는 2018년 1천216곳에서 2019년 1천33곳, 2020년 1천62곳, 2021년 1천176곳, 2022년 1천272곳, 2023년 1천341곳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과밀 입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다. 특히 가까운 지역에 편의점이 밀집해 사실상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야간 영업시간도 단축하고 있지만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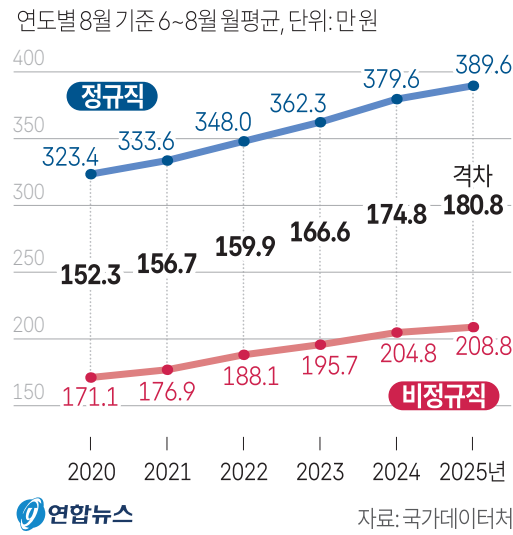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폐업하기도 쉽지 않다. 계약 기간이 남아 과도한 위약금을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만 보는 업주들이 있다. 국제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동시다발적으로 격화되는 전쟁과 분쟁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 당장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대의 시련기다. 해서 편의점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인데, 노예제나 다름없는 폐단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다.

성장세였던 편의점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이려 가족끼리 돌아가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4시간 영업 원칙도 깨졌다. 일부 악명높은 프랜차이즈의 갑질부터 근절해야 한다. 아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계 당국이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미이행 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픽 뉴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령층 비정규직이 300만명을 처음 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180만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터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정규직 근로자는 1천384만5천명으로 16만명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2천241만3천명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작년과 같았다. 이는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직전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 8월(38.4%)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3천명 증가한 304만4천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2021년 27만명 증가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이기도 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전년 대비 2.3%포인트(p) 상승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 케 팅 부	650-2070	광 고 국	650-2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시 원 국	650-2011	편집국	650-20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서 업 인 부	650-2007	입 문 국	650-20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